

김동완 행정부지사 취임



이완구 충남지사와 함께 민선 4기 중반기를 이끄는 김동완(50)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3월 13일 도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행정부지사는 취임사에서 “‘행정부지사’란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되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며,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부지사는 1980년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 기획담당관과 금산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대전=연합뉴스)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확정

- '논산 대둔산·홍성 내현권역' 등 2권역 선정

충청남도는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논산시 별곡면 대둔산권역'과 '홍성군 구항면 내현권역'이 농림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선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형 방식에 의거 마을주민,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 5개 권역과 2006년도 2개 권역, 2007년도 3개 권역 등 10개 권역으로서 평균 74%의 진척율로 도내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신규착수 예정권역인 ▲논산시 광석면 광석권역 ▲금산군 제원면 신안권역 ▲서천군 마서면 물버들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하여도 세부설계, 시행계획승인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조속 이행토록 하여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원기준은 권역당 3~5년간 권역의 규모에 따라 40~70억원 수준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80%와 지방비 20% 재원이 지원되며, 도내 총 대상 100개 권역에 대하여 2017년까지 7천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세계적인 ‘크리스탈 밸리’ 종주지 실현 나서

— 산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한마음로 대응책 강구

‘소니와 샤프’가 LCD 10세대 라인 합작투자를 설립키로 공동 발표함에 따라(2월 26일자) 삼성전자 LCD 총괄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책에 나섰다.

2003년도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삼성과 소니가 LCD 7세대에 뒤이어 8세대 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로 LCD패널 매출액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제1위의 매출액을 달성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소니는 자국(일본)내 샤프와 동맹을 맺으면서 10세대 LCD 패널에 대해서는 삼성과 합작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비춰지고 있어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소니의 현 상황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원방안 및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강한 질책과 지시가 있었다.

이에, 채훈 정무부지사는 경제통상실장을 주축으로 산·학·연 전문 실무진 등 15명으로 하는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3월 4일 디스플레이센터(아산시 음봉면소재)에서 삼성전자 외 8개 업체(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부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삼성, 협력업체 등) ▲ 삼성·소니의

10세대 라인 LCD 패널 합작투자 무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협의 ▲ 道 차원의 지원사항 검토 ▲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종합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 삼성전자·소니와의 10세대 라인 협력관계 무산으로 인한 피해 분석 ▲ 디스플레이 업계 동향(국내, 도내 부품업체) ▲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대응방안 파악 ▲ 도 차원의 지원방안 ▲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 등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충청남도도 디스플레이산업의 무궁한 육성발전과 세계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체 협의회(가칭)’를 설립하여 전방산업인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TOP Maker를 확보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일본, 대만 등 LCD패널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道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은 “삼성전자와 소니와의 결별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및 주요장비 부품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 2010대백제전』 국제행사 타당성 입증

－ 경제성 분석 및 행사주체, 개최시기 및 기간, 주요 행사구성 등 논의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공주시와 부여군이 백제문화제를 통합,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가칭)2010 대백제전’을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하여 이완구 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대백제전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10 대백제전 타당성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백제전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 B/C(편익/비용) 비율은 1.02, 경제적 타당성 B/C 비율은 1.83으로 대백제전 개최의 타당성이 있으며, 38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7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6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보고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에 문화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보고회에 이어, 행사 개최의 주요사항인 행사주체·개최시기 및 기간·행사의 주요 구성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가칭) 2010 대백제전’은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화 하기 위한 목적하에,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이 공동 주관으로 2010년 9월에서 10월중(50일간)에 199억 원의 규모로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 및 충남방문의 해 선정을 추진중에 있어, 해외 방문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2010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 용역’에 대백제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 및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 등 품격있는 행사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 백년대계 도청이전사업에 탄력 부여, 신도시건설 촉진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됨은 물론 2012년 도청이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 '08. 2.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95명중 182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은

- 본문 총 7장 42조, 부칙 3조로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국비지원 ②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③ 33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④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등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폭넓게 담겨져 있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①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비 부담 완화와 함께 적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도시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② 도청이전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시 적용될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사항 모두를 의제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재정력은 물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었으며

- ③ 특히, 이전기관 시설비 용자·지원, 입주법인 및 단체 편의시설 설치,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시설유치 촉진과 함께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 ④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전환훈련, 소득 창출사업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 ⑤ 신도시 특성에 맞는 학교설립안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한 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용역 중인 도청이전신도시 교육특구와 접목시켜 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명문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명문교육지구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도 관계관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

앞으로 충남도는 200만 도민이 함께 염원해 왔던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로 위임된 이전기관 이전비용 지원, 개발예정지구 주민지원대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확보 및 시설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들의 바람과 성원, 그리고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합격점

- 12일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시연회 개최



상진료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충청남도는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이 구축,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방향과 비전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 보건의료분야 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

이번 원격협진 시연회에서는 해상악화로 병원선이 이동진료를 나가지 못하여 삼시도 보건진료소에서 병원선에 원격진료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 (이동진료차량→순천향대학 천안병원 / 병원선→순천향대학 천안병원)하여 원격협진 시연을 했다.

특히 이날 시연회에 참석하는 서울대학병원 김석화 교수 및 보건의료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u-헬스 기반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의 1, 2, 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21C를 대비한 차세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 현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의료법 등 현행 제도 하에서 u-헬스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모델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도서지역 및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이 어려운 오·벽지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u-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본격 가동 중이며



그간, 도는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한화S&C 등 13개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의 「복지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국비 4억 7천만원, 도 및 시·군비 7억 2천만원, 민자 13억 5천만원 등 총 2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병원선,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 청양군보건의료원(이동진료차량), 사회복지시설,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등 10개소에 '0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형 u-원격영상진료”, “u-생활습관관리”, “u-만성병관리” 등 유형별 서비스 모델 3개를 선정 개발하였다.

또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황실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IT 업체인 “K3I”에 운영지원센터를 설치 장애 접수 및 진단 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축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시범사업을 소외된 취약지 도민들에게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찬 도약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농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충청남도 인터넷방송국 2월1일 개국

- 생생한 일일 도정뉴스, 교양강좌 등 제공



충청남도의 각종소식을 신속하고 생동감있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2월 1일 인터넷 방송(CNi TV)을 개국하고 충남도정과 의정 및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내 PC 보급률이 66.6%에 이르는 등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건 성숙에 따라 도민과 네티즌들에게 생동감있는 도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각각 (주)위더스텍과 (주)케이쓰리아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1년여 동안 인터넷방송 운영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해 12월 IP-TV 개념의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시험운영을 지속해오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2월 1일 개국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 인터넷방송(CNi TV)은 일일도정뉴스를 중심으로 도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정브리핑, 강한 충남을 의미하는 충남포커스, 지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소식을 전달하는 매력충남,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UCC와 교양강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충남배움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남 인터넷 방송은 IPTV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단순히 PC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 아닌 TV를 통해서 도·의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영상정보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면서 고급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한다.

이 밖에도 홍보프로그램으로 충남의 기업탐방과, 재래시장, 충남 느낌여행 등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녀교육, IT강좌, 교양강좌와 이민 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이 안방에서도 생생한 도정을 접할 수 있으며, 참여마당과 게시판 등을 통해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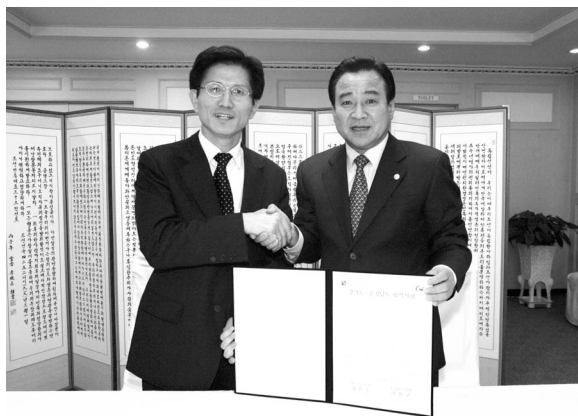
들도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이완구 지사는 “앞으로 지역 언론사 및 시·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네티즌들에게 보다 친숙한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의 인터넷방송이 중부권 최고의 방송으로 사랑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인터넷방송(CNi TV)은 홈페이지 <http://tv.chungnam.net>에서 볼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와 당진군에 설치 합의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월 9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만찬회동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청사입지는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에 입지 ▲初代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공동 임명 ▲개발계획의 조기확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 등 이다.

이완구 지사는 청사의 입지와 관련, 당진군에 설립하는 것이 順理라고 밝혔으며 빠른 시일내에 당진지역에 설립되는 청사에서 충남은 물론 경기지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업무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년에 시 승격이 예정된 당진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시 승격과 맞물려서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은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앞당기되 늦어도 7~8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초대 청장의 추천권은 경기도에 양보하고, 청사 위치를 당진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당진군이 명실상부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이완구 지사가 태안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2박 3일간의 일본 환경성, 후쿠이현 방문 귀국길에 곧바로 이어져 배석자 없이 2시간 넘게 시종 웃음이 넘쳐 나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도가 함께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 중앙 공동대응, 청의 하 부조직, 향후 로드맵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토 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양도의 흔쾌한 합의는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안시 양 도지사가 직접 세 세한 부분까지 설명함으로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공조에 이은 것이어서 2개 시·도 공동 추진 의 경우 흔히 있는 이해 충돌의 우려를 지휘부에서 직접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다른 시·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능동적 대응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본 수정계획 기본구상에는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 충남 구현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평택~행정도시, 안성~행정도시, 보령~공주간 등 고속도로, 도청신도시에서 동·서·남·북측 고속화도로,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충청선(보령~조치원), 서해선(야목~예산) 등 철도, 보령신항, 대산항, 장항항 등 SOC 구축을 기반으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남공주 역세권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기호유교문화 유적정비, 한방 바이오밸리, 한산모시콤플렉스 개발 등 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력증진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동안 84조 4,344억원이 투자되고, 부문별로는 사회인프라 구축 38.8%,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 24.1%, 산업부문 16.6%, 문화 관광부문 8.4%, 환경부문 6.6%, 생활복지부문 3.1%, 자원개발 부문 2.4%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조 2,634억원(46.5%), 지방비는 11조 5,733억원(13.7%), 민자 등 기타가 33조 5,977억원(39.8%)이다.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충남은 ▲인구가 2005년 19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5년 38조 1,400억원에서 98조 9,700억원, ▲1인당 GRDP는 2005년 1,952만 4천원에서 3,958만 8천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63.3%에서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도에서는 내실 있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0여명의 도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십 회의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그 시안을 마련하였고, 도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의회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도청신도시~천안·태안·평택·금산간 고속화도로’, ‘서해산업선 철도’ 등에 대하여 진통을 겪었으나 SOC사업에 대한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과 체계적 전략으로 대응하여 도 차원의 장기 발전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하였다.

이에 최종안에는 지역균형 발전, 도청이전 신도시,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등 충청남도가 요구한 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앞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충청남도의 미래상과 발전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와 시·군에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의 기본이 되면서 중앙정부에는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되며, 민간 기업에는 지역개발 정보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건설, 환황해권시대 개막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에 맞추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역동적 충남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新충남 시대 열어갈 터

- 2월 25일부터 이전, 3월 14일 개청식

충남발전연구원이 대전을 떠나 공주로 이전하며 제2의 개원을 맞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공주시 금홍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내에 신청사로 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3월 14일 오전 10시에 공주시 금홍동 신청사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그리고 각급 기관장 및 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우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연구원 가족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충남의 현안과 미래 비전 연구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개원 이래 첫 독립청사인 충발연 신청사는 지난해 4월부터 충남공무원교육원 내 부지에 39억여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71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모습〉

전국 8개 연구기관, 서해안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

-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 출범 및 연구교류협력 체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분야별 정책·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국토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8개 연구 기관은 2월 15일 11시 30분에 서울 KEI에서 각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은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교환을 위한 연구교류협력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고지역 중장기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분야별 정책 제안 제시 ▲중장기 협동 연구사업(2009~2011)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의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응’이란 주제 발표도 있었는데, 정 박사는 “해수욕장 조기 복원·개장과 수산업 조업재개를

위해서는 방제 종료시점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사업을 위해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희망하는 움직임과 조기 개장시 양식어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어질까 우려하는 갈등 등 방제·보상기관과 현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수욕장 조기 개장을 위해 방제기법의 강도를 증가하면 생태계회복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수준의 친환경적 방제기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유류오염 연안해역 정화방제 평가를 수행한 캐나다 SCAT팀이 언급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방제·보상기관, 관광·경제 관련 상가·해수욕장 종사자,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럼 관계자는 “1차 정책제안 보고서를 올 6월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종합 보고서를 올 하반기에 발간하고, 각 연구기관별 유류유출사고 관련 정책카페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환경복원과 피해배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발표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개최

— 유류유출 피해지역 갈등 예방과 사고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시급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월 13일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소장 이재은)와 공동으로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1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피해지역의 미래발전과 갈등관리, 주민의 복지와 건강, 주민공동협의체 구성 등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제들로 선정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지역의 환경문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간, 주민간, 민-관 간의 갈등 예방 노력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실천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역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사고 발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사고원인자의 무책임한 행위, 피해배상 및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갈등 심화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갈등 구조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므로 피해주민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해결하고, 사고 책임 여부의 결과에 따른 잠재적 갈등 해소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운 교수는 “태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은 갯벌의 기능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 생태모니터링 실시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실행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 ▲갯벌 간척·매립을 최소화하고, 갯벌의 정화능력 상실을 막는 방안 실행 ▲생태관광지 개발 시 생태계 현황 파악과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수용능력 산정 ▲태안의 자연자원 및 문화적 자원 등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이주호·최희천 연구원은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앙집권적 대응일 경우 구조적인 유연성을 저해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 그리고 관할 영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반면, 비록 정책 결정의 집행으로 전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조정과 통합 등의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류유출사고 혐의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운영을 위한 재원과 공식화된 운영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목적과 기능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의 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주민대표자회의를 함께 뒤 이해관계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수립시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국제 심포지엄

—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 열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으로 1월 24일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열렸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하여 도청이전 신도시를 충남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국내외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다양한 제안과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관련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실무 설계자 및 지역내 각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에 달하는 청중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매끄러운 행사진행과 우수한 발표자,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에서 초청된 발표자들은 22일 입국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23일 헬기를 이용하여 상공에서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답사하는 등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진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런던대학의 매튜 칼모나 교수와 세계적인 도시개발기업인 리포 그룹의 고든 벤티튼 씨는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MIT대학의 폴 루케즈 교수는 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장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도시설계 전략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나고야 대학의 시미즈 교수와 광주대학교의 이명규 교수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설계 과정의 중요성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제안하였다.

각 분과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비단 환경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도시설계 분야에 대한 토론에 나선 대한주택공사의 조성학 부장은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공간과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구조를 구상하여 도시 전체가 활력있는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박소현 교수와 경원대학교의 정석 교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문화에 적합한 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 계획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분과별 토론 이후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기풍 본부장, 백운수 미래 E&D대표, 남궁영 충청남도 도청 이전본부장이 참여해 주요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와 계획방향에 대한 제안을 앞으로 진행될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R-PACK 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하)는 충남지역 산업인력 수급 Mismatch 해결을 위한 『2007년 충남 R-PACK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평가 실시를 지난 1월 30일(수) 온양관광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충청남도 사업담당관, 외부전문가, 사업담당, 충남소재 14개 대학(이하 사업단) 담당자,

충청남도, R-pack사업 자문단, 센터 연구진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평가에서는 충남 R-PACK사업 운영방법 및 내용에 대한 평가로 내실있는 충남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남 R-PACK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객관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고도화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력 Mismatch 해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모델이었던 것에 비추어 사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및 충남RHRD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업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인 취업으로의 연계, 각 사업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중점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7년도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 최종보고회를 지난 2월 28일(목) 온양 팔래스호텔 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관계관 및 충남RHRD 분과협의회 위원, 충남RHRD 중점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19개)의 사업책임자 및 관계자와 충남RHRD지원센터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2007년도 충남RHRD 중점사업의 최종보고 자리로써 기관별 자체 평가 및 분과협의회 위원 평가와 기관별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적 안배와 함께 현안을 감안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사업에 접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유망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틀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화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으로 교육대상자의 욕구 및 능력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중·장기적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의 마련과 RHRD센터에서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공유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HUB역할 수행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2008년 지자체주도연구소사업 평가회”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충남전략산업기획단 공동 주최

2008년 3월 10일 “2008년 지자체 주도 연구소사업 평가회”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주도연구소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특화된 지역연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선도한 거점 연구기관 설립과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과제수는 전국단위로 서울을 제외한 3~4개 사업단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주도연구소사업은 지난 2월 4일 사업공고를 통해 2월 29일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았고, 현장실태조사와 함께, 3월 10일 평가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금산군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가 지원을 하였으며, 금산군은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표명하였다.

평가를 통해 중앙단위에 지역추천된 사업 중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단은 매년 6~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5년 이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중앙선정평가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2007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회 개최

- 행정안전부 주최, 충청남도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 주관



「2007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실적 자체평가가 2008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평가는 「국가균형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 12 조 · 13조」에 의거 「시 · 도지사는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이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각 광역지자체에서 평가회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 자체평가는 예년 평가와는 달리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권고하여 충청남도는 충남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본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체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위원은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충남도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균특법 제7조에 의거 수립된 시 · 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지역혁신계정 24개, 지역개발계정 58개 사업)이었으며,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인센티브지원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활용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2007년 계정별 평가대상은 지역혁신계정 25개 단위사업 1,167억 2,600만원, 지역개발계정 55개 단위사업 7,060억 3,800만원으로 총 80개 단위사업이 평가되었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2007년도 보고서 발간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2007년 동안 수행한 다양한 활동 중 “지역경제연구회”,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기획연구팀”, “지역혁신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3개의 사업 추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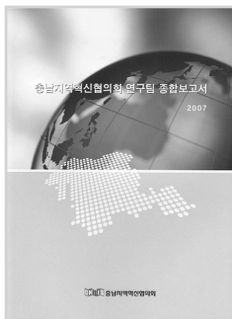
■ 지역경제연구 2007



2007년에 4차에 걸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나타난 충남도내 경제현안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및 개선방안이 담긴 「지역경제연구 2007」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1차 연구회 -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효과와 대책, 2차 연구회 - 벤처기업의 성과영향요인, 3차 연구회 - 대전지역 대규모 효율적 종합관리 방안, 4차 연구회 - 2008년 경제전망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역경제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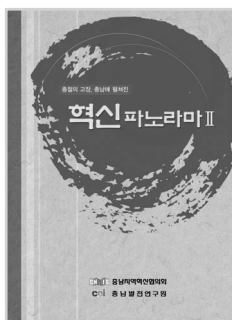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연구팀 종합보고서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2007년 3명의 협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약 6개월 동안 도정현안에 관한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획조정분과 강전근 위원의 취약계층 직업능력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분과 강병익 위원의 충남 고령화친화산업 발전방안, 인적자원개발분과 황복주 위원의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등 세개의 주제아래 수행된 연구내용이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연구팀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 충절의 고장, 충남에 펼쳐진 혁신파노라마Ⅱ



본 사무국에서 위촉한 5인의 집필진들이 직접 사업단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 그리고 2007년 6월 2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충남지역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충남도지사 및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한 충남도내의 9개 지역혁신사업기관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에 이어 「충절의 고장, 충남에 펼쳐진 혁신파노라마Ⅱ」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충남도내 9개 지역혁신사업기관의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충남도내 혁신기관의 향후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안내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워크숍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강수계 관련기관을 초청하여 시행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군에서의 원활한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3월 20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충남도 최경일 수질관리과 수계담당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현안’, 이상진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수질오염총량관리 현상과 과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질의 및 건의토록 하여 원활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충남도와 해당시·군, 그리고 총량센터의 유기적 관계유지와 협력을 통해 2차년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서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도시재생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 충남도, 충남발전연구원, 14개 참여대학, 기업체대표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8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도시재생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춘천시 공무원, 춘천시 의원, 교수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송상열 박사(한호건설(주) 전략기획사업단)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실태 분석과 강원도 도시 제언’을 통해 지방도시의 낙후원인과 그 결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상호작용으로 비롯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주식 과장(춘천시 주택행정과)은 ‘춘천시의 도시재정비 실태와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춘천시의 구도심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김영기 박사(중소기업청)는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일본의 시가지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도 이석권 교수(강원대 건축학부), 정성훈 교수(강원대 지리교육학과), 이재수 의원(춘천시 의회), 김중기 과장(춘천시 건축과), 추용욱 박사(강원발전연구원)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사전 조사와 도시의 특성, 개성을 찾아 계획수립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주도의 개발계획 수립은 지양 △대규모 선도적 개발추진 (랜드마크 -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 △복합적인 기능의 다양화 (축제, 레저, 문화, 상업 등) △문화유산 및 역사경관의 보존과 활용해야만 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조봉운 책임연구원은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방의 중소도시의 쇠퇴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은 시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